

결혼과 여성의 지위 - 약자는 누가 만드는가

성공한 남편 체면 살리기에 희생된 여자들

신한국의 개혁정국은 부정부패의 광맥을 캐는 중에 악처의 행렬을 발견해냈다. '남편 모르게' 부동산 투기를 하기도 하고 자식을 부정입학시키기도 한 악처들이다. 이 아내들은 '잘 나가는 남편' 앞길을 망치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남편의 공적에 생채기를 냈으니 악처라 불리워도 달리 부인할 방법을 찾기도 어려워진 형편이다.

‘처성자옥’에 갇혀
앞길 그르친 남편들

특히 입시부정과 관련해 공직을 내놓게 된 명망가들을 안타깝게 쳐다보는 여론은 마침내 처성자옥(妻城子獄)이라는 고사성어까지 들춰내기에 이르렀다.

저서가 90여권에 이른다는 교육학계의 거성인 손인수 교수의 아내는 남편 몰래 6천만원을 들여 늦은막에 얻은 막내아들을 부정입학 시켰다고 하여 남편 ‘공적 생채기’를 낸 주인공이자 ‘유명 교육학자의 뜻밖의 수난’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소개됐다. 남편 몰래 5천만원을 주고 아들을 부정입학 시킨 장성득 육본인사운영감(소장)의 아내는 ‘남편 앞길 그르친 장군의 아내’가 됐다. 민자당 사무총장 최형우 의원을 ‘물러나는 개혁의 칼’로 만든 장본인도 남편 몰래 아들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부인이었다. 부정입학 사례를 제공한 유명인사들의 보도에는 한결같이 ‘남편 몰래’라는 말이 관용구처럼 따라붙었다.

자식 때문에 공직을 내놓은 유명인사들도 있었다. 박희태 전 법무장관도 새 정부에서

하필 ‘남편 모르게’라는 관용구가 한결같이 등장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말이 진실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래도 의문점은 더 커진다. 수천만원에서 억대가 넘는 거금이 오가는 과정들이 ‘청렴한’ 남편들은 몰랐다고 한다. 이 말은 우리나라 주부들이 예상외로 거금을 남편 모르 게 주무를 수 있는 경제적 권한을 가졌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 거액이 드나드는 것을 모른다면 그집에서 남편의 존재는 무엇인가? 거의 모든 가정사가 여자 손에 넘겨져 있다는 말이 되는데 정말 한국의 주부들이 그렇게도 어마어마한 권한을 넘겨 받고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돼 있다고 인식돼 왔던 주부들에

‘남편 몰래’를 끝까지 주장하고 나선다. 불명예의 수렁에서 남편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조강지처다운 처신들’인 것이다.

가족과의 동행에
실패

‘남편은 모른다’는 주장이 불행의 와중에서 비난의 여론을 최소화시키는 방패막이 노릇을 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로부터 집안의 사소한 일에 참견하는 것은 사나이대장부의 금기 1호가 아니었던가? 참한 여자 ‘마누라’로 앉혀 놓고는 입신양명을 위해 줄기차게 매진 하노라면 어느새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혼인을 하게 된다. 사회생활에서 물러나 손자를

이 역할 분담의 함정은 이번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남자는 몰랐다는 주장이 진위를 떠난 곳에 있다. 이번 처성자옥의 피해자들은 ‘가족과의 동행’에 실패한 성공한 남자들의 약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던 것이다.

성공에 기울인 노력
10%만 가정에 쏟았어도...

지금에 와서 그들은 “조금 덜 뛰더라도 가족이 다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들 성공한 남자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가족들 전체의 성장을 위해 쓸 수 있었다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속에서 때때로 용솟음치는 대장부의 포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생활의 정치”라는 개념이 유행어처럼 자리잡기 시작한 지금 집과 사회, 남자의 영역과 여자의 영역의 구분은 전처럼 명확하게 그어지기 힘들다. 모든 사람에게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에 ‘가정을 등진 사나이다움’이란 이미 남자의 매력이 아니라 역사를 거스르는 부덕의 요소가 됐다.

성과 감옥,
남자들 스스로 만든 것

남자를 가두는 것은 아내와 자식이 아니라 가족을 뒤에 두고 혼자 독주하는 남성다움의 가치관이다. 또 가정에 무관심한 소크라테스가 아니었다면 그의 세기적인 악처 크산티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입시부정사건을 계기로 남자들 사이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악처를 누가 만들었나?”를 성찰하며 남자들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성과 감옥을 빠져나올 방법이 궁리되어야 할 것 같다. (김효선·김명순 기자)

의약품
대중광고

과학적 규제 시급

시민의 모임 토론회서 지적

의약품 대중광고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는 비난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의약품 대중광고 심의규정을

명확히 구분, 의약품 광고규제를 과학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모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39.1%가